

“혁신·포용... 한국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사람·산업·사회제도 등 전방위 혁신 필요” 주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혁신과 포용으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생생지라(生生至樂) 특강의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588년 칼레 전투에서 영국이 무적함대 스페인을 이긴 이유는 혁신과 포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혁신은) 가아할 길이다. 패러다임의 틀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00년에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노동은 1.0%, 자본은 3.8%, 혁신은 2.0%를 기여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 경제성장률은 2.9% 성장했는데 노동은 1.0%, 자본은 1.3%, 혁신은 10.6%로 기여도가 하락추세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

라며 “과학기술·사람·산업·사회제도 등 전방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해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왜 우리는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도 기술무역수지는 적자인 지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람 혁신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고시촌에 젊은이들이 몰리는데 중국은 창업을 위해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며 “어떤 사회는 ‘물린 사회’가 되고 어떤 사회는 ‘열린 사회’가 되고 있다.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에서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쓴 소리를 했다. 김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미국은 자율주행차, 중국은 드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일본은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뭐가 미래 먹거리가 될 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제도혁신 가운데 규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규제 유연성 순위에서 한국은 전세계 95위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며 “혁신성장은 규제혁신, 혁신생태계, 혁신거점, 혁신지부·안전망 등을 통해 기업이 정산, 창업투자 등으로 성장·일자리·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명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계층이 고착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질문을 던졌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산 상위 10% 국민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의 42.1%를 가지고 있다. 하위 50%는 전체 자산 중 10.9%를 보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상위소득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한다. 그런데 하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38%

올라갔다”며 “옛날에는 낙수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랫목만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운을 뗐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받게 하고 생계비를 낮춰서 가처분소득과 소비투자를 늘리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성장 잠재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조화롭게 같이 가야 한다”라며 “이념과 진영의 잣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논리는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과거에는 물적자산 중심 투자, 모방·추격형, 결과중시 양적성장 등으로 압축성장을 했다”며 “이제는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지속가능성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임실축협 여성아카데미 3기 발대식 실시

임실축협(조합장 전상두)은 지난 19일 여성아카데미 3기 발대식을 실시하였다.

임실축협은 매년 여성조합원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동조합의 이념과 건강강화, 웃음치료를 통한 힐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도 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실시될 예정이다. 전상두 조합장은 “여성아카데미가 사회활동과 정보교류를 통해 농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합원의 상생을 통한 조합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며 74명 회원 전원이 수료하는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0.3%p 인하 효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서 정부 소상공인 지원방안 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올 상반기 진행되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를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그는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증대하는 금융업”이라며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 출시

모바일 앱 통해 주말·휴일 이용... 최저 연 2.82%

카카오뱅크가 오는 23일부터 카카오뱅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 전 대출 한도와 금리 수준 사전조회는 잔금 예정일(이사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카카오뱅크 앱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절차 등만 거치면 된다. 평균 소요 시간은 2분 내외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명 등 각종 서류는 스캔방식으로 카카오뱅크가 확인한다. 스캔방식이 불가능한 전월세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앱에 업로드하면 된다. 2영업일이면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미 전월세 대출을 받은 경우, 현 직장 1년 미만 재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계약 전 대출 한도와 금리 수준 사전조회는 잔금 예정일(이사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카카오뱅크 앱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절차 등만 거치면 된다. 평균 소요 시간은 2분 내외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명 등 각종 서류는 스캔방식으로 카카오뱅크가 확인한다. 스캔방식이 불가능한 전월세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앱에 업로드하면 된다. 2영업일이면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국산 가공축산물, 이르면 올 상반기 필리핀 수출

우리 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의 필리핀 수출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DA)과 가공 축산물의 수출 검역 요건 및 위생 협의를 끝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 국내산 축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지 4년3개월 만의 일이다.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양고기·원소고기 등 원료육을 가열·훈제·건조·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발생의 여파로 생육 수출은 불가능하다.

필리핀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FDA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TD)를 받은 현지 수입자(카운터파트)를 통해

수출 제품 등록인증서(CPR)를 발급 받아야 한다. 검역증명서와 자유판매 증명서, HACCP(해설·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도 갖춰야 한다.

수출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 희망업체가 FDA로부터 수입업자로 허가받는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빠르게 상반기 내 첫 수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생육의 수출 시기는 가능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필리핀과의 협상 완료로 계기로 동남아 시장의 가공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위생 관리, 통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주매일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